5·18 보상 접수 마감 '코앞' …정부, 보상지원위도 안 꾸렸다

광주시, 내달 31일 마감 앞두고 613건 접수…행안부, 신청대상·보상 기준도 안 정해

8년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보상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 남겨뒀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신청대상·보상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광주시는 12월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지급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한은 특별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제8차 보상에서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 등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조차 없어 자신이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해직 언론인에게는 최초이자 마지막 피해보상 기회인데, 광주시도 '기준이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라'는 식이다보니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언론인까지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청자 수 또한 지난 1~7차 보상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0년 실시된 1차 보상에서는 2693명, 2차(1993년)에서는 2788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3차(1998년) 837명, 4차(2000년) 868명, 5차(2004년) 527명, 6차(2006년) 1008명, 7차(2015년) 506명 등 지금까지 9227명이 보상 신청을 했다.

제8차 보상은 기존과 달리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추가 신청 대상자가 수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접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성폭력피해자 신청 건수는 16명에 불과했으며, 학사징계는 166명, 해직 언론인·교사는 7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5·18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는 홍보 부족이 원인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보훈대상자 등 명단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 차원에서 나서서 독려해야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며 "유족회도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수막 등을 토대로 홍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지현 5·18부상자회 초대 회장은 "홍보가 안 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알면서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상도 지역에 거주 중인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폭력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돈 몇 푼 받겠다고 보상 신청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며 "광주시뿐 아니라 5·18 공법단체들이 나서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접수 보상금은 심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설차량 점검 2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제설장비보관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동절기 폭설을 대비해 제설차량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출동 장비 전시 용역 내년 6월로 연기

기록관 수장고 확충 사업과 겹쳐 장소 정해진 뒤 진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기종과 동일한 군 장비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 전시하는 사업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부터 5·18출동 군장비 이전·정비·설치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장갑차, 지휘용 장갑차, M113장갑차, M48전차, 500MD 군용헬기 등 총 5대의 군 장비를 설치 및 전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군 장비 설치 예정지에서 5·18기록관 수장고 확충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시 장소가 겹치자 문제가 생겼다.

5·18기록관이 신설 수장고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내년 6월께 구체화할 계획을 세웠는데, 수장고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질 지 모르니 군 장비 설치 위치도 못 정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용역사에게 군 장비 이전 및 정비 비용으로 총 계약 금액 7900만원 중 70%인 5500만원을 지급하고 용역을 중지시켰다.

또한 5·18기록관에 수장고 건축 기획 용역 단계에서 군 장비까지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24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폐기 예정인 군 장비를 대여해 광주 5·18교육관 앞 공터로 이송했다.

당초 5·18자유공원에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5·18 자유공원에는 군 장비가 출동한 적 없다"는 등 반발에 부딪혀 5·18교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국방부로부터 장비를 대여한 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이며, 광주시는 이후로도 무상으로 대여 기간을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신속처리를"

시민모임 "판결 후 5년째 불이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단체)이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의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이 1년 8개월간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단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뤄진 사건이고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압류를 확정한 사건"이라며 " 단체는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판결로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눈 소식…내달 1일까지 1~3㎝

광주·전남지역에 다음달 1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새벽부터 다음달 1일 오전 사이 광주 및 전남 서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29일 예보했다.

다만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서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적설량은 1~3㎝다. 비로 내릴 경우 강우량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관측이다.

30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3도에 분포하겠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1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겠다. /유연재 기자 yjyou@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핑계로 판매거부 못한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가 리셀(재판매) 우려를 핑계로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회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유명브랜드 3사의 제품을 웹사이트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無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